

2008년도 북한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북한은 2005년도 '선군의 위력 제고기'와 2007년도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강조를 거쳐 김정일 정권 3기에 들어가는 2008년도를 '선군조선의 승리기'를 열어가는 '핵억지력 보유' 경제 강성대국 건설 임무완수의 해로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1. 대내부분

'핵억지력 보유'를 선군정치의 정통성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질서 회복과 부분적인 개혁개방 조치를 병행하면서 체제쇄신과 비사회주의의 현상 확산 차단에 주력

□ 정치: 선군정치의 정통성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핵 억지력 보유' 「강성대국」 시위

북한은 정권 창건 60돌·「제3기 김정일 정권」출범¹⁾을 계기로 '핵억지력 보유' 「강성대국」을 시위함으로써 김정일의 선군정치 정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김일성-김정일 생일(4. 15/ 2. 16), 군 창건 기념일(4. 25) 및 김정일 총비서 추대 기념일(10. 8) 등을 통해서 김정일의 '위대한' 지도력의 산물로 '핵억지력 보유'를 강조하는 각종 보고대회 및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작년의 경우 「2. 13 합의」 이후 북미관계 진전을 통한 국제적 제재 탈피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들의 '핵억지력 보유' 강조를 억제해 온 반면, 2008년에는 '핵불능화' 단계를 넘어 '핵폐기 단계'로의 진입을 고려, '핵국가'로서의 지위를 당연시하여 '핵군축' 차원의 핵폐기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핵억지력 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할 것이다.

1)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일을 기준으로 1기 정권: 1998년-2002년, 2기 정권:2003년-2007년, 3기 정권: 2008년-2012년으로 규정

‘핵억지력 보유’는 김정일 지도력의 ‘위대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즉 북한 주민들이 핵보유국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 경제: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체계의 질서 회복과 개혁개방 ‘구호’없는 실용적 개혁개방 조치 이행

북한은 ‘정치 · 사상 강국’에 이어 ‘핵억지력 보유’ ‘군사강국’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강국’ 건설 실천을 위한 각종 정책적 활동을 집중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 세상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 당할 자 없다. 이제는 싸움준비가 끝났으니 인민생활을 쳐 세우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구호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이다.

김정일 자신은 경제 관련 공개활동을 민생안정을 위한 ‘에너지문제 해결’, ‘경공업 발전’, ‘먹는 문제 해결’ 관련 현지도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 ‘경공업 발전’, ‘먹는 문제해결’과 관련된 각종사업 독려 등 민생문제와 직결된 경제활동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력갱생형 개진’, ‘현대화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 관련 경제단위들의 모범사례를 전면 부각시키면서 경제건설 주민노력동원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주민들의 시장 장사행위를 제한하면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각 단위의 직무직종으로 돌아가서 보다 열심히 일하게 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체계 질서를 회복해나가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장관리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자기 직무직종에서 일을 더하게” 한다든가 “시장장사를 나이에 제한하여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바로 가지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상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북한은 「민생 3대(依·食·住) 과제」 해결과 재정·금융제도 개편 등 「新경제개혁」 시행 및 외부 투자 유인을 위한 대외협력 확대를 개혁개방 ‘구호’ 없는 개혁개방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다.

□ 사회: 체제쇄신 및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통제 강화

북미 양자대화의 확대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북한의 당국/ 비당국 주민들의 '평화환상'을 억제하기 위한 단속과 사상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개방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면서 남한정부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남한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남한의 신정부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는 내부 선전선동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한 체제쇄신 차원에서 북한의 간부층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 '비사회주의그루뵏' 중 간검열 총화, 중앙검찰 총화 등, 간부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불만확대 방지와 사회분위기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다.

국경지대에 대한 단속 강화, 불법 녹화물 및 선전물, 핸드폰 및 전화, 시장 장사 등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통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 대외부문

북한은 경제건설 및 체제보장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경제적 지원 확대를 추구하면서, 베트남 등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 확보 등 외교적 활동의 다변화 노력 강화.

□ 「부시」 임기 내 경제 제재조치 해제 및 북미군사회담 채널 구축 목적 달성 추구

북한은 2. 13 합의 및 후속조치 연속선상에서 ▲북미 직접협상 ▲경제 제재조치 해제 ▲경제·에너지 지원 획득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핵비확산 관련 부시 행정부 치적의 하나로 북핵문제 해결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 북한은 적극적인 대북협상자세를 고수할 것이다. 즉 북한은 미국과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통해 부시 대통령 임기 내 최소한 경제 제재조치 해제와 북미 군사대화 채널 구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대미 관계개선 차원에서 다양한 초청·방문외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상응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대미비난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대미관계 개선 압박을 위한 외교적 환경조성 노력 강화

2008년도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조성 차원의 외교활동을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다.

북한은 '핵 그물'에서 벗어나서 '중심고리'인 미국의 외교적 빗장을 완전히 풀고 국제적 고립탈피와 경제발전을 도모해 나가려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테러지원국 및 대 적성국 교역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압박할 수 있는 외교활동

을 우선적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 외교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는 핵문제를 매개수단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서방외교 및 여타지역 외교 확대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 경제건설 지원확보를 위한 외교적 활동 확대

북한은 경제건설 관련, 국제적 지원 확보를 위해 테러지원국 및 대 적성국 교역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압박할 수 있는 외교활동에 주력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먼저 대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노력에 최우선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조총련 자금문제'라든가 '대일청구자금'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난 해소를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 목표 추구 측면에서도 외교적 급선무 중에 하나다.

이어서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협력과 지원을 도출해 내는 경제외교에도 치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 대러시아 외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지닌 채 교류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북한은 이러한 한계성에서 비교적 자유스러운 협력국가로 베트남을 상정하고 베트남과의 외교 활동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베트남은 그들 고유의 개혁개방정책 즉 ‘도이모이’ 정책을 통해 비교적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해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와는 달리 북한이 베트남으로부터 이러한 개혁개방 경험을 전수받더라도 비교적 체제위협의 위험성은 적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개방 경험의 전수를 위해서나 사회주의체제 협력외교 차원에서 베트남과의 외교를 보다 확장해나갈 것이다.

3. 대남부문

경제적 실리획득을 위한 기존 대화체제 유지 속 「강·온 이중 대화전술」을 구사하면서 남한 내 반미투쟁 및 반보수대연합을 위한 ‘민족공조’ 정책을 지속하여 차기 총선에서 일정한 영향력 확보를 기도

□ 경제적 실리획득을 위한 기존 대화체제 유지 속 「강·온 이중 대화전술」 구사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실익(경제적 이익 등)획득 차원에서 각종 남북대화에 호응해 왔으며 인도적 차원의 대화 역시 경제적 실리획득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왔다.

그 결과 남한의 대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경제적 결핍을 보완해 주는 주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어서 기존에 구축된 남북관계 기본틀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한 지속적인 실리획득을 위해 남북관계의 기존 틀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각종 남북회담(정상회담, 총리회담, 국방장관 회담 등)에서 현 정부가 약속한 남북 협력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조건 없이’ 남북대화에 적극 임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또한 사회문화분야 교류는 경제적 실리확보와 차기 총선 영향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신정부가 남북협력 사항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매개로 미국으로 하여금 남한정부를 설득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90년대 제네바 북미 핵협상 타결시 남북대화 재개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과는 반대국면인 셈이다.

남한의 신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약속 이행에 대해 미온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대남 군사적 위기조성을 내용으로 한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강화하면서 당국간 대화지속 또는 중단을 병행하는 「강·온 이중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사회의 국론분열과 군사적 긴장조성을 통해서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

□ 남한 내 반미투쟁 및 반보수대연합을 위한 '민족공조' 정치 지속

북한은 “민족중시는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배격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기본 입장”(노동신문, 2007. 3. 14)으로 정의하고, 이전의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이후 조성되었던 남북한 관계의 냉각책임이 미국 및 친미보수세력에 전가함으로써 반미투쟁 및 반보수 대연합을 위한 '민족공조' 정치행위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대남 '민족공조' 정치 행위는 남한에 보수적 색채가 강한 신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그 효용성이 크게 반감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남통일선전전략의 일환으로 '민족공조'정치의 불씨를 살려나가고자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민족공조' 관련 대남 분위기 제고를 위하여 민간차원의 각종 남북행사 (예: '6. 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대내외적 선전선동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남한의 총선을 겨냥한 대남정치 개입

대남정치개입 관련, 북한은 남한의 차기 총선을 겨냥한 대남 정치공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의 총선구도를 「친북 평화세력 대 반북 전쟁세력」의 대결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의 전략적 대남 총선정치개입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남한 총선 관련 북한의 정치적 개입은 ‘반 한나라당’ 선전선동 활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반한나라당’의 경우, 한나라당에 대해 ‘반북 전쟁세력’ ‘친미 보수세력’ ‘남조선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역적무리’(노동신문 2007. 6. 7)로 몰아붙이는 비난공세를 재개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남한의 차기 총선을 겨냥, 여·야 및 진보·보수 진영의 대북정책 정쟁화와 북핵문제 관련 정치적 논쟁 확산을 기도할 것이다.

동시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이의 책임을 한나라당과 신정부에 전가함으로써 한나라당과 신정부를 ‘반북 전쟁세력’으로 몰아가고자 할 것이다.

□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남북군사회담 기대 어려움

북한은 남북경협 활성화와 대북지원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보장회담에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군사문제를 북·미 양자대화 틀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긴장완화 중심의 남북 군사회담에는 소극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한의 관심사항인 군사적 신뢰구축은 사실상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과 도전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긴장완화 중심의 군사회담 개최요구를 강하게 받게 될 경우, 서해 해상분계선 재설정문제를 거듭 강조할 것이다.

4. 군사부문

제한적인 범위 내의 군사력 증강 노력과 군에 대한 '수령보위' 중심의 사상교육 및 정치·조직행사 조직에 주력

제한적인 군사력 증강 노력

북한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례적 동계훈련과 하계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게 될 것이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무기체계 개량 및 노후무기 교체, 대량살상무기 중심 비대칭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군에 대한 '수령보위' 중심의 사상교육 및 정치·조직행사 참여에 주력

북한은 지도자 즉 김정일에 대한 충성유도 차원에서 '수령관'을 의식화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군대에 대하여 '수령보위' 중심의 내용이 강조되는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인민군대에 모든 문제를 '혁명의 수뇌부' 즉 김정일 보위 견지에서 철저히 보고 대하도록 교육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잡생각의 여유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군인들에게 충실성, 절대성, 무조건적 정신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 조직 행사조직에도 주력하게 될 것이다.

연락처: 정영태(KINU 북한연구실장) 011-246-0685